

# 국가간 시민성 함양에 관한 도덕교육적 접근

변 중 헌\*

## 〈 목 차 〉

1. 머리말
  2. 국가시민성에 대한 문제제기
  3. 세계시민성에 대한 문제제기
  4.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조화
  5. 맺음말
- \* 참고문헌

##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폭발적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세계화를 화두로 하는 21세기는 정보통신 분야의 혁명적 발전을 기반으로 전 지구를 하나의 정보망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단위의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경제체제가 구축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의 경쟁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인권, 전쟁, 빈곤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개별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 제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세계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의 확보와 함께 개별 국가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식과 태도의 함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민의 육성과 함께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즉 세계시민성이나 세계시민의식(world citizenship)은 간단히 세계적 소양과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적 소양이란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식, 태도, 행동으로서 다른 나라의 문화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및 배타성이 없는 선별적 수용능력을 뜻한다. 또한 세계적 역량이란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능력을 말한다.

세계시민성이나 세계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이 요구된다. 또한 전쟁, 인권, 자원, 빈곤, 환경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타당으로 문제해결에 동참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하고 각 나라의 문화가 가진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또한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세계 인류의 평화와 복지 그리고 각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관을 내면화해야 한다. 아울러 자국에 대한 자긍심과 주체성을 확립하면서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국가시민성(state citizenship)과 세계시민성(world citizenship)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생략된 채,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조화를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의 성격을 국가·민족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라고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1998, 28). 이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 의식의 함양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의 육성을 올바른 시민의식 그리고 국가·민족의식과 함께 도덕과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

를 살펴보고,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조화가가능성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가능성과 그 방향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2. 국가시민성에 대한 문제제기

민주시민교육이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여 그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주적 가치와 태도 등 민주 사회의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성이나 민주시민의식(democratic citizenship)이다 (변종현, 1999). 이처럼 현대적 의미의 시민은 그들 스스로의 삶의 조건과 질을 향상시켜 가는 사회의 주역으로서 그러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자질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대 민주 사회가 시민들의 자율적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면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민주적 자질과 태도의 함양이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이러한 민주적 자질과 태도가 교육적 노력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율성 관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니부어(R. Niebuhr)는 이른바 애국심의 윤리적 역설(ethical paradox of patriotism)이라는 논의를 통해 시민성을 요구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전형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어떠한 신랄하고 예리한 분석을 거부하는 애국심에는 윤리적 역설이 내재되어 있다. 애국심을 통해 개인적 이타주의가 국가적 이기주의로 변환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역설이다. 국가에 대한 박약한 충성심이나 아니면 향토애 등과 같은 지역적 애착심과 비교해 볼 때, 애국심은 매우 차원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애국심은 모든 이타적 충동을 실어 나르고 그것을 표출하는 원천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 대한 열정이 국가에 대한 개인들의 비판적 태도를 차단하거나 완전히 말살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무조건적 헌신이 바로 국가 권력의 기반이며, 국가가 아무런 도덕적 제약도 받지 않고 권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토대이기도 하다. 이렇게 개인들의 이타심은 국가의 이기심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Niebuhr, 1960, 91).

니부어는 구체적으로 애국심이나 국가시민성과 관련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민주시민성에 내재된 철학적 토대를 비판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체 공동체의 일부만이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구성원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제한하고 그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차별화된 사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바로 보편화가가능성에 입각한 반론이다. 둘째는,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자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자율성의 의도적 포기과 국가에 대한 복종이 어떻게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가 바로 자율성에 입각한 반론이다. 셋째는, 국가에 충성하는 개인들은 국가나 국가의 정책과 여러 가지 제도 등에 관해서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 문제는 일종의 지혜에 입각한 반론에 해당된다 (Niebuhr, 1960, 93-112).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물론 자유주의자들 또한 민주시민성의 철학적 토대를 옹호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본질을 엄밀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모든 시민들이 그들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열망을 추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선택에 관해서는 중립적이다. 국가의 과업은 시민들이 덕을 갖추도록 하거나 아니면 선한 생활에 관한 어떠한 특별한 혹은 본질적인 관념을 강요하지 않는 가운데 기본적인 개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Buchanan, 1989).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일련의 관계나 유대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자유주의자들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귀속관계나 사회적 역할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고 또한 두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관념에서 볼 때, 각 개인은 그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각 개인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능력의 행사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각 개인

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장해 주는 입헌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더욱이 자유로운 시민들이 특정 국가에 속하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특정한 국가의 시민성은 모든 국가에 마땅한 시민성이라고 봄으로써 국가시민성의 철학적 토대에 대한 비판에 답하고 있다 (Dauenhauer, 1996, 26).

### 3. 세계시민성에 대한 문제제기

#### 1) 민족국가의 위상

시민성을 개인과 국가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볼 때, 시민성 개념은 민족국가 그리고 민족주의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 영토 등에 기초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하나의 결속력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것은 사람들에게 집단적 정체감과 개인적 소속의식을 제공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개인들의 정체성의 근원을 하나의 주권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집단) 속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 민족은 개인들이 충성을 바치는 주된 대상이고 집단적 결속의 기반이 된다 (Greenfeld, 1992). 이것은 세계시민성 내지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이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니부어에 의하면, 개인의 이타심은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개인들의 사회적 동정심이 확산된다고 해서 인류의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의 이타적 열정을 민족주의나 심한 경우 국수주의로 바꾸기는 쉬워도 인류 전체를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류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가보다 규모가 작은 공동체인 종교, 문화, 인종, 경제단체들도 시민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가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예컨대, 중세의 교회는 보편성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국가와 경쟁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다르다. 현재로서는 국가가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다.

국가는 다른 공동체들이 결여하고 있는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상징들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 속에 국가의 요구사항을 각인시킬 수 있다. 여기서 상징(symbol)의 의미는 매우 크다. 국가는 국가적 의식과 행사를 통해, 군사력의 과시를 통해 권위와 위엄의 상징들을 드러내며, 이러한 상징들은 시민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애국심이라는 시민들의 감정을 통해 무한한 힘을 얻게 된 국가는 국가의 전망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게 되는 것이다 (Niebuhr, 1960, 92). 따라서 오늘날 시민들의 일차적 충성의 대상은 세계공동체도 아니고 국가보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도 아닌 국가라는 점이다.

관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른바 세계시민성에 반대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이유는 또 있다. 아렌트(Hannah Arendt)는 국가의 역사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제도들이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전체 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시민성을 지닌 전 지구적인 국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세계정부가 개별 국가의 이름하에 자행된 그 어떠한 잔혹 행위 보다도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동질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특정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세계의 시민이 될 수는 없다. 전 지구상에 걸쳐 중앙집중화된 권력을 지닌 어떠한 세계정부를 상정하든 관계없이, 전 지구를 지배하며 다른 주권에 의해서 견제되거나 통제받지 않는 모든 폭력적 수단을 독점하는 하나의 세계주권이라는 관념은 무시무시한 전제정치의 악몽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한 모든 정치 생활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Arendt, 1968, 81).

아렌트에 의하면, 정치적 관념들은 다수의 인격체들과 그들 사이의 상호제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민들은 언제나 특정 국가의 동료 시민들 사이에서만 시민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국가는 언제나 많은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국가일 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은 동료 시민들과 그가 속한 국가의 영토적 경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고 제약되는 것이다. 하나의 주권을 지닌 소위 세계정부의 창설은 세계시민성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는커녕 모든 시민의식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정치의 정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세계정치의 종식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Arendt, 1968, 82).

위와 같은 아렌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아니면 머지 않은 장래에 하나의 세계국가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케네디(Paul Kennedy)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는 여전히 구성원들이 충성심을 표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남아있다. 국가만이 정책을 공식화할 수 있는 체계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명령과 지휘계통을 지니고 있다. 오직 국가들만이 생태학적, 군사적 문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눈앞에 산적한 대규모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국가 이상으로 갖춘 다른 제도나 조직은 없다 (Kennedy, 1993, 336). 더욱이 시민들이 공동체의 이익과 고통분담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요구할 때, 정의의 이름으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여전히 국가밖에는 없다 (Buchanan, 1995).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개인들이 그들과 그들의 동료들이 살아가야 하는 조건과 환경을 결정짓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서, 즉 시민성을 발휘하고 행사하는 것에서 가능하다.

1974년에 아롱(Raymond Aron)은 다국적 시민성(multinational citizenship)의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Aron, 1974). 여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분석적인 이유이다. 한 사람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무를 뜻한다. 만일 내가 나의 의견을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나 제도들은 나를 제약하지 않는 것은 물론 누군가가 나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하는 의무 또한 지녀야 한다. 만일 어떠한 집단이나 정당, 노조가 가두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어떠한 초월적 권위는 다른 집단이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한다. 이 때 이러한 권위는 국가권력의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강제나 제약의 수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처럼 특정 국가의 시민일 때에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고, 초월적 권위인 국가의 기능 수행 또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역사적인 이유이다. 이것은 시민성과 군복무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된다. 보통 선거권이 부여되기 전인 18세기말 19세기초에, 많은 프랑스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보통 선거권을 주장한 것은 1848년의 임시정부였으며, 나폴레옹 3세는 이것은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지었다. 그러나 그는 왕정복고 시기부터 내려온 직업군대는 유지하였다. 아롱은 직업군 제도가 역사적으로 정착된 상황에서 다국적 시민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롱은 또한 국가시민(state citizen)과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경제공동체에 속해 있는 경제시민(economy citizen)을 구분하였다. 경제시민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 반면에, 국가시민들은 언제나 그의 조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시민은 국가의 보호와 후원 하에서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시민과 국가사이에는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유럽시민이라는 관념은 적어도 아롱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비록 당시의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가 소속 국가의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유럽시민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적어도 유럽이 하나의 연방국가로 발전하지 않는 한, 프랑스 시민, 독일 시민, 이태리 시민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아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유럽이 하나의 연방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태였다.

## 2) 민족주의의 영향력

세계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는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인 세계화가 민족주의와 전혀 모순되지 않으며, 민족주의의 영향력을 침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Greenfeld, 1993). 유럽공동체(EC)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그들이 민족주의를 통해서 얻은 품위와 위엄을 박탈당하는 데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연합(EU)이 경제영역에 국한되었을 때에는 유럽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마스트리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을 통해 유럽의 통합과정이 경제영역을 넘어 사실상 모든 정책분야로의 확대되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것이 민족의 주권을 침해하고 가입국들의 권위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적인 상호 의존관계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인들 상당수가 유럽통합을 원치 않았다. 유럽의 개별 국가들에게 있어서 유럽통합은 민족적 갈등과 오래된 반감을 해소하기는커녕 그것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는 것처럼 간주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자노위츠(M. Janowitz)는 충성심, 민족주의, 시민성과 같은 관념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공통적으로 이들 관념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구성원들이 표하는 국가와 정치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의무를 나타낸다. 그가 보는 시민성은 시민적 권리와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노위츠는 민주주의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특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즉, 정치체계를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기여와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들의 의무를 기꺼이 행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시민성이 충성심과 민족주의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와 충성심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는 충성심을 영토와 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애착(절실하고 근원적인 소속의식, 종교적 혹은 인종적 일체감과 유사한 감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근대 민족사회의 예토스와 연계되어 왔다. 하지만, 그는 민족주의와 충성심이 진부한 관념이 되었다고 보고 이른바 시민적 양심(civic consciousness)이라는 개념을 대신해서 제시하고 있다 (Janowitz, 1983). 그것은 한 인격체가 민족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애착에 해당되며, 개인적 헌신뿐만 아니라 이성적 요소 및 자기비판과도 관련된 관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노위츠는 일종의 세계연합이 민족주의나 충성심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민족이나 국가시민성이 해체될 것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다만 그는 민족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세계정부와 세계국가의 등장 가능성에서 찾는 대신에 민족국가 내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예컨대, 1960-70년대 미국 사회에서 분출된 인종적 민족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소공동체주의(communalism)나 아니면 특정집단이 멕시코인 아메리칸(Mexican-Americans) 이나 블랙 아메리칸(Black-Americans) 등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시민적 의무의 기반을 잠식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좌파, 우파 혹은 자유주의 등과 같은 경제이데올로기가 민주적인 정치체제의 엘리트나 대중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들을 위한 정당성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의 집단적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의식이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될 것 같지는 않다. 민주적 시민성이나 시민의식은 자발성에 기초하며 집단적 복지를 위한 도덕적 책임감에 의해서 자극되고 고취되는 것이다. 더욱이, 시민의식은 민족적 책임과 의무는 물론 국제적 책임과 의무 모두와 양립가능하며 또한 그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적 권리와 의무라는 두 기둥에 기초하고 있는 시민성은 민주적 정치제도의 역동성을 지탱

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실 세계의 어디서도 민족국가와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세기에 세계는 다민족 국가가 민족국가로 해체되는 과정을 분명히 지켜 볼 수 있었다. 구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백을 메운 것은 민족주의였다. 아랍 세계의 경우, 아랍국가들은 그들이 하나의 집단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공연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Kramer, 1993). 유럽과 다른 대륙에서도 민족국가들이 사라지기보다는 다양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민족의 시민성과 정체가 어떻게 규정되고 보존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이라는 가시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시민성이나 시민교육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 폭발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4.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조화

### 1) 사회변화와 민족주의

1848년 민족주의가 정점에 달한 시점에 역설적으로 마르크스(K. Marx)는 경제, 정치적 세계화 과정이 민족주의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자본주의의 확대에 따른 경제의 세계화가 불가피하게 민족주의의 퇴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민족주의의 붕괴를 예견하는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브레진스키(Z. Brzezinski)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민족주의는 더 이상 사회 변동의 추진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산업사회의 아이디어는 더 이상 호소력이 없으며, 그 결과 민족주의 대신에 전 지구적 의식을 강조하는 시민성의 관념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Brzezinski, 1970). 홉스봄(E. J. Hobsbawm)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역사가 민족과 민족국가의 테두리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하나의 세계사로 기술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민족이나 민족국가와 같은 단위는 지구라는 새로운 초민족적·초국가적 개념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거기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부차적이고 사소한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다 (Hobsbawm, 1998). 리프킨(J. Rifkin)에 따르면, 물질,

에너지, 노동에 기초한 경제로부터 정보통신에 기초한 경제로의 변화가 시장을 좌우하는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민족국가의 위상이 더욱 약화될 것이다. 그는 정보와 통신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람과 공간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거의 정치적 제도와 흡사한(quasi-political) 것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족국가를 지탱하고 있던 군사력은 이제 하이테크에 기초한 전 지구적인 세계경제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Rifkin, 1995). 국경을 지키는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무의미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부의 학자들은 민족주의나 민족국가에 기초한 시민성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롭고 보다 보편적인 시민성과 시민의식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민족적 소속의식보다는 보편적 인류애에 기초해서 형성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이다 (Soysal, 1994). 예컨대, UN인권헌장을 통한 인권의 제도화 등은 이와 같은 시민성 개념의 세계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민성 개념은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한정된 사람들만을 규정해 왔고, 민족성이나 국적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 왔다. 따라서 민족성이나 국적의 제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민성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권위구조와 공공생활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Derrida, 1986).

사실상 시민성의 유형과 관련된 이와 같은 변화는 이론적 논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유럽공동체가 제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시민의 위상에 관한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소수 민족의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단기 체류자나 이주 노동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원주민 공동체의 구성원들, 조국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난민들의 국적과 관련된 쟁점들은 시민성과 관련해서 인권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터너(B. S. Turner)는 인권이 시민권을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urner, 1993). 실제로 정치가 점점 더 세계화됨에 따라 정치과정을 규범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시민성 혹은 시민의식과 양립할 수 있는가?

홉스봄에 따르면, 19세기 민족주의 운동의 전형적인 특징은 그것이 통일과 해방의 가치를 내걸었다는 데 있다. 반면에 20세기 말의 민족주의 운동은 인종, 언어 혹은 종교적 독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양식의 정치조직을 거부하는 등 분리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그 본질적 특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족주의에서는 더 이상 진보나 발전의 동인을 찾아볼 수 없고, 민주주의와도 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Hobsbawm, 1990).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를 구분하면서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린펠드(L. Greenfeld)는 민족주의를 개인적-자유주의적(individualistic-libertarian) 민족주의 대 집단적-권위주의적(collective-authoritarian) 민족주의, 시민적(civic) 민족주의 대 인종적(ethnic) 민족주의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들은 각기 다른 가치에 기초해 있으며, 그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의 사회적 행위, 문화, 정체성과 정치제도를 낳고 있다. 개인적-자유주의적 형태의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교의와 중복된다 (Greenfeld, 1992). 집단적-권위주의적 민족주의는 집단의 독특성과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적 민족주의에서 시민적이라는 것은 민족의식이나 민족성이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또한 획득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인종적 민족주의에서 말하는 인종적이라는 것은 민족의식이나 민족성이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떠한 형태의 민족주의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가능성이 국가와 사적영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위상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시민사회는 자발적이고, 자생적이며,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다. 그러면서 법적 질서나 일련의 공유된 규칙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조직화된 사회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는 이해관심과 열정,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국가에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적영역에서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Diamond, 1994). 이처럼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들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공고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2) 국가간 시민성의 대두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의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고 보장해 준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권리가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아직도 그와 같은 과정이 진행중인 지역도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보편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과정이 민족국가로 발돋움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2가지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첫째, 시민성과 국가 구성원의 자격이 하나의 같은 의미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직 국가의 구성원들만이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18세기에 시민권이 국가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보편적인 성질을 지니게 되면서 이른바 국민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때부터 의무교육이나 학교의 공민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 개념은 민족국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 다른 입헌적 전통, 정당체계, 정치문화, 정치사, 그리고 상이한 언어를 지닌 20여 개의 개별 민족국가들로 구성된 하나의 유럽연합(EU)을 구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유럽의 민족국가들이 그들의 주권을 점점 더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주권의 포기나 상실의 초국가적 정책(supranational policy)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막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른바 국가간 민주주의(transnational democracy)와 시민성의 관념을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세계국가 관념에서 파생될 수 있는 파국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이나 혹은 하나의 세계국가(a global state)와 같은 단일체제에 의해서 민족국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지 파국의 시작일 뿐이다. 하나의 세계국가와 그에 따른 세계시민성의 관념보다는 국가간 시민성 내지 국가간 시민의식(transnational citizenship)의 관념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간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현재와 같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발전하게 될 민족국가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며, 모든 수준의 초국가적(supranational) 정치에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는 민주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지금까지는 유럽연합 형태의 세계시민성 관념이 국가간 민주주의와 국가간 시민성에 기초한 가장 세련되고 발전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간 민주주의와 국가간 시민성 관념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NGO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8세기의 시민들은 국가의 시민이자 세계시민이 되도록 교육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세계시민성이 추상적인 이상으로만 남아있었고, 실제의 학교교육은 오히려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미래의 진정한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시민성의 이상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Ichilov, 1998).

국가간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수많은 NGO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복지, 환경보전 그리고 핵전쟁으로부터의 보호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증진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결과이다. 국제단체나 NGO등에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채널들이 아직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다양한 시민 그룹들이 조직되어 종종 국제적 쟁점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시민들은 점점 더 그들의 삶에 물질적이고 도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터너에 의하면, 시민성은 사회적 관계의 지구화와 사회체계들의 점증하는 사회적 차별화 양자 모두를 포용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Turner, 1997). 이제 민주시민성이나 민주시민의식은 국지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정치적 영역에만 배타적으로 관련된 좁은 의미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게 즉, 폭넓은 사회적 관심사에 관련된 그리고 전 지구적인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국가간 공공영역의 재건

주지하듯이, 민주시민교육은 도덕교육의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뒤르켐(E. Durkheim)은 교육을 통해 교화시켜야 하는 도덕성의 핵심요소로 규율, 사회집단에 대한 애착, 자율 등 세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시민성이나 시민의식에는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시민적 덕성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Turner, 1997).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젊은 세대들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citizenship

competence)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같은 시민으로서의 능력이 구비될 때 비로소 개인들이 생기있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Porter, 1996).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처럼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시민성 관념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다양한 사회세력들로부터 부과된 제약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의 시민들은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동의 뿐만 아니라 불만을 표출하고, 개혁적인 정신과 때로는 권위당국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용기(civic courage)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Turner, 1997; Etzioni, 1970). 또한 시민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시민성이나 시민의식은 얼마나 대가를 잘 지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성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Dahrendorf, 1996, 33). 인간의 존엄성, 평등, 정의, 연대의식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권리들은 사회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얻어질 수 있는 부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자유처럼 민주적 시민성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것들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목적의식과 연대감을 심어주며 오늘날처럼 파편화 되어가고 있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Pratte, 1988).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사적인 영역으로만 움추러드는 경향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과 국가적 공공영역 및 국제적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의 결여가 신뢰감, 효율성 그리고 이웃의식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와 폭력의 급증, 인종주의의 만연, 가정의 파괴, 사회적 불평등, 환경파괴, 인권의 침해 등은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은 개별 국가와 전 지구적 차원 모두에서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것을 재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양심적

이고 효율적이며, 관심을 쏟고 배려할 줄 아는 그리고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시민들을 길러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은 공공영역이 물리적 공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상호간의 복지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행동 공간이기도 하다 (Boulding, 1988). 민주시민교육은 또한 전 지구적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서 공공영역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어야 한다. 즉, 국가들사이의 공간(transnational arena)이 우리의 도덕적, 물질적 복지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Ichilov, 1998, 272). 왜냐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표들은 전 지구적 차원의 인식과 협력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 5. 맺음말

젊은 세대들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주로 서구의 비교적 안정된 정치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Ichilov, 1990). 따라서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과 조건 및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요구와 필요 그리고 인류와 지구의 보편적인 가치를 고려하는 가운데 민주시민성이나 민주시민의식의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매우 다양하다. 인종적 민족적으로 이질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더욱 다원화되는 가운데서도 전지구적인 문제와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전승을 강조했던 민주시민교육은 오늘날과 같이 역동적이고 복합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서구 민주주의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민주시민성의 의미가 확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민주시민성은 주로 정치제도 등에 관한 사실적 지식을 제공하는 대신에 논쟁이 될 만한 쟁점들에 대한 토론은 배제해 왔다. 그러나 점차 민주시민교육은 환경, 성의 평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전 지구적인 차원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민주시민성의 내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육방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수동적 학습과정으로부터 역할놀이, 공동체활동, 그리고 컴퓨터시뮬레이션과 같은 적극적인 참여 활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과정은 세계시민성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민주시민의식이나 민주시민성은 이른바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이 잘 조화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성은 개별 국가의 경계를 토대로 민족이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헌신만을 강조하는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시민성의 의미 확대는 하나의 주권을 지닌 세계정부의 시민성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세계정부와 세계공동체의 시민이라는 현실감이 부족하고 추상적인 범주보다는 개별 국가와 국가사이의 상호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또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도덕적·사회적 영역을 적극적으로 채울 수 있는 이른바 국가간 시민성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민주시민성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의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 참고 문헌 ❖

- 교육부(1998). 「도덕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변종현(1999). "21세기를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 정향",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42호, pp. 65-85.
- Arendt, H.(1968). "Karl Jaspers: Citizen of the World?" in *Men in Dark Time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Aron, R.(1974). "Is Multinational Citizenship Possible?" *Social Research Vol. 41*: 638-656.
- Boulding, E.(1988). *Building a Global Civic Cul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Press.
- Brzezinski, Z.(1970). *Between Two Ages*, New York: Viking Press.
- Buchanan, A.(1989). "Assessing the Communitarian Critique of Liberalism," *Ethics 99*.
- Buchanan, A.(1995). "Federalism, Secession, and the Morality of Inclusion," *Arizona Law Review 37(1)*: 53-64.
- Dahrendorf, R.(1996).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M. Blumer & A. M. Rees eds., *Citizenship Today: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T. H. Marshall*, London: UCL Press.
- Dauenhauer, B. P.(1996). *Citizenship in a Fragile World*,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Derrida, J.(1986). "Racism's Last Word," in H. L. Gates Jr. ed., *Race, Writing and Differ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amond, L.(1994). "Rethinking Civil Society: Toward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5(3)*: 4-18.
- Etzioni, A.(1970). *Demonstration Democracy*, New York: Gordon & Breach.
- Greenfeld, L.(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feld, L.(1993). "Transcending the Nation's Worth," *Daedalus 22(3-4)*: 47-63.
- Heater, D.(1990).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London: Longman.
- Hobsbawm, E. J.(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chilov, O.(1990). "Dimensions and Role Patterns of Citizenship in Democracy," in O. Ichilov ed., *Political Soci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Democra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Press.
- Ichilov, O.(1998). *Citizenship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London: The Woburn Press.
- Janowitz, M.(1983). *The Reconstruction of Patriotism: Education for Civic Consciousne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nnedy, P.(1993).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 Kramer, M.(1993). "Arab Nationalism: Mistaken Identity," *Daedalus* 22(3-4): 171-207.
- Niebuhr, R.(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Porter, A.(1996). "The Aims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in L. N. K. Lo & Man Si-wai, eds., *Moral and Civic Education*, Hong Kong: 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 Pratte, R.(1988). *The Civic Impera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Press.
- Rifkin, J.(1995). *The End of Work*, New York: G. P. Putnam's Sons.
- Soysal, Y. N.(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urner, B. S. ed.(1993). *Citizenship and Social Theory*, London: Sage.
- Turner, B. S.(1997). "Citizenship Studies: A General Theory," *Citizenship Studies* 1(1): 5-19.